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국립 5·18 민주묘지로 가는 길머리가 온통 하얗게 물들었다. 오월이 되자 진 입로 양쪽에 도열한 이팝나무들이 어귀 없이 흰 꽃부리를 밀어 올린 것이다. 가늘고 긴 꽃잎들은 햇까지 끝에서 고갈 모양의 꽃차례로 소담스럽게 뻗어 나간다. 멀리서 보면 때 아닌 눈꽃이 핀 듯도 하고, 흰 구름이 몽실몽실 내려앉은 것 같기도 하다.

너른 봄으로 추모객들을 맞이하는 꽃잎의 자태는 민주화를 갈망했던 순백의 영혼들을 닮았다. 가지마다 조롱조롱 매달린 꽃송이는 영광없는 하얀 이밥(쌀밥) 덩이다. 영령들엔엔 추모의 메를 지어 올리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그해 오월 함께 나섰던 주먹밥을 내밀며 대동(大同) 세상을 일깨우는 듯하다.

이곳에 이팝나무들이 심어진 것은 5·18 묘지 성역화 작업이 시작된 지난 1995년 봄부터다. 수백 그루의 이팝나무는 이후 매년 입하(立夏) 무렵부터 5·27 부활제 즈음까지 스무 날가량 활짝 꽃을 피워 오월을 환하게 밝힌다.

이팝나무의 너른 품처럼

이팝나무 꽃그늘을 지나 5·18 묘지로 들어서면 '민주의 문'과 '참배 대기실'(지난 2월 준공)이 방문객을 맞는다. 참배 광장에는 전통 당간 지주를 형상화한 5·18 민중항쟁 추모탑(높이 40m)이 우뚝하다. 탑신 가운데 감싸 쥘 손 모양 안의 난형(卵形) 조형물은 새 생명과 오월 정신의 부활을 염원하는 뜻이다.

은펜칼럼



임명재 약사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 주장하며 이를 타도해야 한다고 한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 등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스트 트랙에 상정하여 자동적으로 법안이 심사되고 분회의에 상정해 결정되도록 만든 것이 '독재 정권'의 근거라고 주장한다. 독재자는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뜻대로만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dictator'라고 한다. 흥미

기고



이병열 4·19 민주혁명기념사업회장

광주는 역사의 고비마다 중심에 서 왔다. 불의에 항거한 광주 3대 민중 항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 1929년 학생독립운동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중 항쟁은 광주 정체성과 광주 정신의 산실이다.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이러한 역사 문화는 광주의 에너지이자 자산이다.

광주는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항상 투쟁의 중심에 서왔다. 그 시원

광주를 넘어 오월을 넘어

5·18 39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에서 온 단체 추모객들이 광장에 줄을 잇고 있다. 옷깃을 바꾸고 제단에 분향한 뒤 '오월의 풀뿌리 꽃밭들이 누워'(문병란, 5·18 묘지 준공 기념 헌시) 있는 묘지로 들어선다. 묘지 번호 1-1엔 청각 장애인으로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숨진 첫 희생자 김경철 씨가 누워 있다. 부상자들을 위해 광주기독병원에서 헌혈을 하고 귀가하던 중 M-16 총탄에 맞아 숨진 여고생 박규희(1-26). 시민군 대변인으로 전남 도청을 끝까지 사수하다 산화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윤상원(2-11).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다 1982년 체포된 후 '5·18 진상 규명, 재소자 처우 개선'을 외치며 50일 간의 옥중 단식 투쟁 끝에 사망한 박관현(2-88) 열사... 이들을 비롯해 현재 제1-2 묘역에는 당시 희생자와 유가족 828명이 잠들어 있다.

'폭도'로 매도됐던 희생자들이 '유공자'로 이곳에 안장되기까지는 17년이 걸렸다. 5·18 직후에는 사람대접조차 못 받고 거적이나 비닐에 덮인 채 손수레 또는 청소차에 실려와 구 묘역에 가매장됐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 단화로 5·18 묘역 조성이 발표되고 1997년까지 성역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오월 영령들은 이곳에 울 수 있었다. 국립묘지로 승격된 것은 2002년 7월이었다.

5·18 유공자들의 가묘가 남아 있는 구 묘역으로 가려면 '역사의 문'과 '송모루'를 거쳐야 한다. 그 길목엔 광주일보를 비롯한 지역 언론사들이 오월 정신 계승을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이듬해까지 추진했던 헌수 운동 기념비가 있다.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실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전남매 일신문(광주일보의 전신) 기자들의 80년 5월 20일 자 호의 글귀를 새긴 시비도 보인다.

구 묘지의 현재 공식 명칭은 망월묘지 공원 제3 묘역이다. 광주시 사적지 24호로 지정된 이곳은 한동안 전두환 정권의 탄압으로 참배조차 어려웠고 위령제는 원천 봉쇄됐다. 묘지 자체를 없애려고 이장을 회유하는 등 방해 공작도 끊이지 않았다.

5·18 구 묘지가 의미를 더하는 것은 이곳에 5·18 이후 안을했던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민주화와 통일·노동 운동을 했다 산화한 전국의 민주민주열사 47명이 함께 안장돼 있기 때문이다.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다 경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부터 1988년 '광주 학살 진상 규명'을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활복 후 투신한 서울대생 조성만, 그리고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가 끝내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 등...

5·18 무력 진압의 진상을 맨 처음 전세계에 알린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공 위르겐 한츠페터의 손톱과 머리카락 등 유품이 안장된 기념 정원도 구 묘역 가까이에 있다.

'전국의 5·18들' 보듬어야

하지만 묘역의 모습은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는 국립 5·18 민주묘지와 달리 거칠고 쓸쓸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담긴 곳이지만 정부가 세운 기념비 하나 없다. 유족과 추모객을 위한 쉼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전사실과 추모관을 갖춘 300평 규모의 '민족 민주 열사 기념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사업이 축소된 끝에 주차장 한편에 50평 규모의 유영(遺影) 봉안소만 들어섰다.

묘지마다 소박하나마 열사들의 행적을 소개하는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시민단체인 광주 전남 추모연대였다. 해마다

열사들의 기일에 추모제를 여는 것이나 안내·별초·청소도 온전히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하지만 추모제가 열리는 날이면 참석자들이 밥을 먹음 공간조차 마땅치 않다. 오죽 서운했으면 일부 유족들 사이에서 '차라리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나가자'는 하소연까지 나올까. 이런 상황에서도 전국의 민족 민주 열사 유가족들은 희생자가 5·18 구 묘지에 묻히는 것을 선호한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오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봉화이자 깃발이었다. 80년대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 분신 정국,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밑받침이 되었다. 그것은 광주만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다. 5·18 무력 진압 직후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추악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갖은 탄압을 일삼았지만 전국에서 수많은 의인들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몸을 던졌다.

80년 5월 30일 광주 학살에 항의하는 '동포에게 드리는 글'을 남기고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투신한 서강대생 김의기 열사가 그 대열의 맨 앞에 섰다. 그는 포함해 80년대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서려져 간 민족 민주 열사는 16명, 민주화 및 학생·노동 운동 희생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127명에 이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대 전 5·18 기념식에서 이들을 '전국의 5·18들'이라고 명명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이 다음달 6일까지 열고 있는 '전국의 5·18들-스스로 오월의 영령이 된 열사들' 기획전에 가면 그들의 생생한 외침을 만날 수 있다.

광주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한 '전국의 5·18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광주의 의무다.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광주가 먼저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 그것은 광주를 넘어 오월을 넘어, 광주가 꿈꿔 온 5·18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좌파 독재'와 '독재자' 논란에 대하여

로운 것은 이 단어가 'dictator'이라는 '받아쓰기'에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과거 로마 시대 집정관이 지시하는 것을 아무런 의견 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말 그대로 최고 권력자에게 아무런 아무런 토의나 검토 없이 무조건 따르거나 이를 반대하거나 거역하면 권력의 힘으로 억압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중학교에 재학하면서 5·18을 겪었다. 그리고 기억한다. 언론은 전두환의 통제 아래 거짓말을 내뱉었다. 그것은 세월호에서 또다시 반복되었다. 군인은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권력욕에 빠져서 충분히 먼 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념 담에서 KBS 송현정 기자가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다. 한국당에서 '독재자'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 정부가 독재 정권의 환경이 아님을 반

증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나 태도를 떠나서 그냥 그 기자가 의도한대로 자신의 스타일로 대답을 진행한 것이다. 특별히 문제를 삼는 것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존경과 존중의 대상인 동시에 지독한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가? 억압에 저항하기 위한 데모가 발생하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자유롭게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군인과 경찰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기자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양심을 거스르게 하거나 법을 위반하도록 억압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덕목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에도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고 어떠한 합리적인 제안에도 반

대 의사는 존재한다. 언론은 여와 야가 항상 싸움만 한다고 하지만 그 싸움을 통해 민주주의는 건강해진다. 일제 잔재적 역사가들은 조선 시대의 당쟁을 비난하며 우리 민족은 모래알 민족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지만, 우리 민족은 그러한 쟁을 통해 자신만의 신념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에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질 수 있던 기제로 펼쳐졌다. 그 덕분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 독재와 부패를 정화할 수 있는 엄청난 민주주의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실현하고자 했던 정치적 철학과 의지를 담은 임기 동안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정치 유전자를 다양하게 유지할 수 있다. 협의와 조정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국정 철학을 국면 돌파를 목적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자신의 색깔을 보여주는 외교와 경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

광주 '4·19 민주혁명 역사관'을 아십니까

인 4·19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를 인증하는 표지석이 금남로 공원에 있다. 4·19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이룬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보듯 3·1 독립 운동과 더불어 4·19 민주 이념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광주는 4·19의 진원지임에도 한동안 이렇다 할 기념물조차 없었다. 광주 3대 민중 항쟁 역사 중 가장 소외된 것이다. 하여 4·19 당시 주역들이 출신수범으로 기금을 모아 2002년 광주 4월 혁명 발상 기념탑을 건립했다. 그 이후 4·19 도로와 4·19 시내버스 등을 조성하면서 정의와 자유, 민주와 숭고한 4·19 이념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3월에는 광주 4·19 혁명 최초 발상지인 광주고등

학교에 4·19 민주혁명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민주 성지로서 광주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됐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4·19 민주혁명 역사관은 3층 건물로 대지 200평에 연건평 251평 규모다.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광주 4·19 혁명의 불씨가 터지는 순간을 포착한 두 장의 사진이 눈에 띈다. 경찰 등이 봉쇄하고 있는 장면과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이 담겼다. 2층으로 가는 계단 옆 벽에는 광주 3·15 부정선거 규탄 '국 민주주의 장송' 시위 모습과 광주고 학생들이 경찰에 잡혀 끌려가거나 차에 실려가는 장면 등 사진들이 전시되고 있다.

2층 전시관에는 4·19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학교 대표 학생들 상징물과 함께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이 전시돼 있다. 광주 3·15 의거가 마산보다 3시간 빨랐

다는 사실도 담겨 있다. 아울러 5·18 영상과 박관현·윤상원 열사, 6월 항쟁의 박종철·이한열 열사 자료를 게시해 '민주성지 광주'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참여했던 각 고교 교복과 모자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거나 구호와 함성을 외칠 수 있도록 하는 등 4·19 혁명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대형 스크린과 터치 스크린으로 4·19 역사를 공부하고 당시 현장을 둘러볼 수도 있다. 4·19 민주혁명 역사관은 광주 역사와 문화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을 비롯해 향토 역사 관련 기관에서는 역사관이 전시·교육 기능을 넘어 광주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관광 코스에 넣어 민주성지 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해주면 정말 좋겠다.

社說

'우리는 보았다' 속속 드러나는 오월의 진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용기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오월의 진실과 참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광주일보가 어제 단독 보도한, 당시 효천역 인근에서 자행된 진압군의 민간 버스에 대한 무차별 총격도 그 중 하나다.

당시 나주시 남평 호혜원에서 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했던 폴 코트라이트(63) 씨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980년 5월 21일 자전거를 타고 광주로 오던 중 효천역 인근에 수많은 총탄 흔적과 피자국이 있는 버스 세 대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민간 버스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헤드램프 위에는 붉은 글씨로 '계엄'이라고 적힌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항쟁 기간 5월 26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외신 기자 통역과 상무관 시신 수습 등을 도운 그는 헬기 사격에 대해서도 "상무관에서 활동하며 손주를 잃은 할머니 등 여러 시민으로부터 '헬기에서 총을 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상당수의 사망자가 광주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 처리됐다는 증언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주한 미군

정보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그해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매장한 시신을 재발굴해 일부는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505 보안부대 특명부장을 지낸 허장환 씨도 "보안부대에서 지문 채취를 마친 희생자 사체들은 대부분 국군통합병원에서 소각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김용장 씨는 특히 "계엄군의 집단 발표 직전인 1980년 5월 21일 전투원이 K57(제1 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 보안대장 등과 회의를 했고, 당시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증언한 계엄군의 민간 버스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민간인 희생자 시신의 무단 소각은 새롭게 확인된 사실로, 당시 신군부의 잔혹성과 진실 은폐를 위한 치밀함을 보여 준다.

전두환의 집단 발표 전 광주 회의 참석 증언도 발표 명령을 위한 귀중한 단서다. 국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구성되지 않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루빨리 출범시켜 이들 증언에 대한 철저한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 지원 수산 보조금 집행 이리 허술해서야

어촌으로 돌아가는 도시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촌 이후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 실태' 자료에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8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이 허술하게 집행됐다. 2010년부터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 받은 978명에 대해 일반 회사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수산업에 전업으로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이들(39명)에게 총 53억원이 지원된 것이다. 수협은행을 통해 3억원 이내의 창업 자금과 5000만원 한

도의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2%)로 대출해 주었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어업 생산성이 낮은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를 통해 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산 직접지불금이 허술하게 관리·감독되는 행태가 지적됐다. 같은 어가에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수산직불금을 신안에서는 중복으로 신청해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용자를 받은 후 수산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하거나 용자금을 환수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당장 환수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보조금 지원 후 철저한 사후 관리로 다시는 형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대한민국 국회가 수개월째 '공전'(空轉) 중이다. 20대 국회는 출범부터 '민생(民生) 국회'를 외쳤고,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3당 대표들은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한국 정치사에서 영원히 종식시키겠다고 했지만, 모두 구두선(口頭禪)에 그쳤다. 민생은 여전히 뒷전이고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회는 일반 국민의 생활이나 세계 등 민생을 돌보며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수립하는 곳이다. 하지만 민생 법안을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민생과 관

리 등은 뒷전이었다. 앞서 4월 국회도 '민선'으로 끝났는데 특히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로 인해 국회는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민생 정당'을 내세웠던 각 정당들도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생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념 정당'이 되어 가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떠나 '민생 대장정'이라며 장외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민생 대장정' 이라기보다는 11개월 앞으로 다가

민생 국회

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지지층의 세 결집을 위한 행보로 보

인다. 특히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TK(대구·경북) 홀대론을 주장하며 해묵은 지역감정을 부추기까지 했으니.

민생은 길거리에서 국민을 선행해서 챙기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아 준 만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민생 법안이나 예산 등을 챙기면서 일해야 한다. 20대 국회는 뉘네게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갈등의 구시대적 정치를 종식시키고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 국회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최권일 정치부장 cki@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국동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월 국 220-0515	문화사업 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취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기획관 리 국 227-9600	업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